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마다 찾아가야 하나요?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고객 변경정보 연계 추진

- 박용진 규제합리화특위 부위원장,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정보 연계 필요성 제안
- 행안부,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제공 범위 확대
- 금융위·금감원,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회사 간 변경정보 연계
-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후 '27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 **84,290건**(출처: 2025 사법연감)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 **1,225건**(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 이번 과제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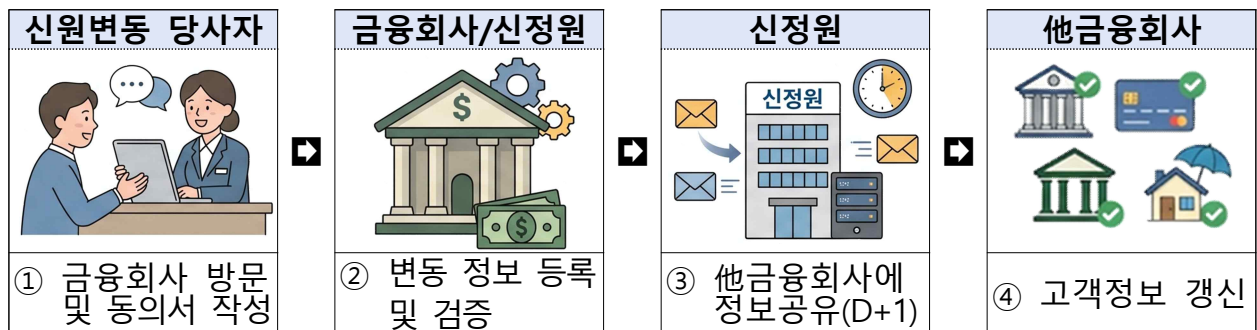
□ 우선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의 고객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을 확대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하여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정보 연계 시스템 절차도>



-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이 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한다.

-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하여 개인정보 변경시 국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결정통지서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누리집의 내용을 보강하여 신청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관계기관은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개선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일상 생활 속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개인 변경정보 금융회사 반영을 위한 대국민 절차 안내문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2396)
		담당자	사무관 강형석 (044-200-2452)
	행정안전부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최이호 (044-205-3141)
		담당자	사무관 박진숙 (044-205-3153)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나윤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02-2100-2696)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김은철 (02-3145-7140)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유형우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최재철 (02-3705-5911)

이름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셨나요? 이제 금융회사 1곳만 방문해도 일괄 변경됩니다.

단, 인증서 및 보안매체(OTP) 재발급, 간편결제 재등록 등은 별도 조치 필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가 다음날 자동으로 일괄 갱신됩니다.

1. 이렇게 이용하세요(이용절차)

1단계. 신원 증명 수단을 준비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규 신분증 또는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2단계. 가까운 거래 금융회사 한 곳을 대면 방문하세요

일괄 변경 신청을 위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한 곳을 대면 방문합니다

3단계. 바뀐 정보를 알리고 동의서를 제출하세요

창구에 변경된 개인정보를 알리고, '다른 금융회사에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단계. 다음날, 다른 금융회사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내 정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2. 기존 명의의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별도 조치 필요사항)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거래 중인 여러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변경되나, **고객정보가 변경된 후에는 기존 인증서 및 보안매체 사용,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등이 중단**됩니다. 개인정보 일괄 변경으로 금융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별도로 조치**해 주세요.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조치 가능)

☑ 자동으로 바뀝니다(일괄 반영)	☞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용카드·보험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의 고객 기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증서·보안매체(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카드 재발급 (새로운 이름으로 표기를 원하는 경우)

3. 참고사항

- (시행시기) '27년 상반기 내 예정
- (문의) 금융감독원 ☎ 02-3145-7142

※ 위 사항은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보안정책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식 시행 전 재안내)